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80
----------	------

발의연월일 : 2025. 3. 31.

발 의 자 : 박용갑 · 조인철 · 박수현  
한민수 · 이병진 · 박홍배  
전현희 · 강유정 · 문진석  
추미애 · 노종면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24년 12월 9일 국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국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음.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하여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하나, 최상목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으나, 최상목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통령이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이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항 단서 신설).
-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 마. 이 법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를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은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판관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다른 처분을”을 “다른 처분을 지체없이”로 한다.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u>&lt;단서 신설&gt;</u>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 ----- ----- -----. <u>다만, 대통령은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판관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u>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u>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 ----- <u>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로 부터 2개월 전까지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u>

④ · ⑤ (생략)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생략)

## <신 설>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따-----

큰 처분을 지체없이-----.

제79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1. ~ 3. (현행과 같음)</p> <p><u>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p>
--	--